

민정당 도서관발전방안 확정

민정당은 3월 12일 도서관행정전담부서설치, 도서관법개정, 시설·장서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도서관발전방안을 마련, 정부와 실시시기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협의중이다.

민정당이 이날 마련한 도서관발전방안에 따르면 도서관육성의 기본조치로 소관부처인 문교부내에 최소한 課단위의 도서관행정전담부서를 신설하고 63년 10월에 제정 공포된 현행 도서관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는 것이다. 또 이 방안은 도서관 발전육성에 관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전문직 부관장제도를 두도록 하고 사서직 공무원의 상한직급을 2급까지 상향조정, 전문직제를 확립하며 사서교사없이(80%이상) 일반교사가 겸무하고 있는 초·중·고교의 학교도서관에도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화하여 충원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유능한 사서교사를 유치하기 위해 사서교사가 주임교사를 거쳐 교감강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등 진로의 기회균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도서관시설의 확충방안으로는 초·중·고교의 도서관설치를 의무화하고 현재 도서관법상 학교도서관에 포함되어 있는 대학도서관의 중요성과 기능을 고려해 학교도서관 범주에서 분리,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공공도서관이 없는 전국 96개 시·구·군에 공공도서관을 조속히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간이도서관을 적극 개발하고 기업및 독지가들의 도서관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조세감면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해 학생들의 도서비 징수를 제도화하고 초·중·고교의 경우 1인당 월3백원 정도를 기성회비나 학교 운영비에서 도서관구입비로 책정케 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신축건물 이전을 계기로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할 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우선 기구를 확대, 인원을 증원하고 관장직급을 상향조정하며 전문직 부관장제를 도입, 업무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도서관법을 비롯한 관련법규(교육법, 학교시설설비 기준령, 대학설치기준령, 조세감면규제법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새로 마련되는 도서관법에는 사서직원의 자격 양성, 국가고시제규정, 납본자료 종류의 확대와 제도의 강화, 국공립 도서관의 입관료 징수철폐, 도서관 협력망 구성규정, 도서관 운영기금 헌납자를 위한 조세감면규정 등이 신설된다.